

'1사 1하천 살리기' 56개 기업 참여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셋강의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한 '1사 1하천 살리기운동'에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그룹을 비롯해 전경련 회원사 56개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기업들이 자사 공장의 폐수를 배출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오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점으로 하천정화활동 및 하천 환경실태조사, 환경개선 사업, 하천오염감시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상하천 지정기준은 ▲기업의 사업장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자사의 폐수가 배출되는 곳 ▲도심지 및 공단주변의 오염이 심한 곳 ▲큰 하천 본류보다는 셋강 등 정화운동 전개가 용이한 곳 등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기업들이 하천정화를 위해 하천바다에 자갈을 깔아 흐르는 물이 자연정화되도록 하는 '자갈접촉 산화법'을 이용토록 하고 학계, 환경단체, 공공기관과 연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추진

기업환경정보의 공개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일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가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은 생산제품이 어떤 환경피해를 유발하면서 제조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마인드를 높이고 기업에는 환경친화적 생산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성공적으로 이를 시행중인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 그 효과를 분석하는 등 올 상반기중에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하반기중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 각종 환경정보를 일련에 공개하는 것을 포함,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개대상 정보는 오염물질의 종류별 배출량, 유독

물질 사용규모 등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다.

환경부는 기업의 오염물질 관련정보가 공개되면 이를 컴퓨터에 입력해 오염사고 발생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 오염원을 추적하는 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기업환경정보가 공개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기업간의 경쟁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판촉전략으로 '그린', '환경보호' 등 객관성이 없는 모호한 환경관련 용어를 상표나 광고 등에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환경용어 규제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용어 규제기준에서 환경친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는 환경친화제품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환경신문고 설치

환경부는 지난 2월 7일 환경오염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오염원을 용이하게 추적하기 위해 환경신문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본부는 물론 전국의 8개 지방환경관리청에도 신문고를 설치하고 각 신문고별 전용 전화와 팩스, PC통신, 우편엽서 등 다양한 신고체제를 갖춰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신문고가 설치되면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게 돼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환경보전마인드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염사고외에 오염의 징후도 신고받아 오염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신문고 도입으로 모든 국민이 환경파수꾼으로 활약할 수 있게 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오염방지에 적극 나서는 등 오염배출원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본부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신문고 체도를 운영해보고 환경보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 일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염방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

통산산업부는 금년중 기업들의 오염물질 처리비용과 오염방지를 위한 생산공정 개선자금으로 모두 2천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7일 밝혔다.

통산부는 또 재정경제원과 협의, 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오염방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청정기술개발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 등에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외국산 설비는 투자금액의 1백분의 3, 국내설비는 1백분의 10에 달하는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기업에 청정기술을 전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어 대기업의 청정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화공단에 청정설비를 시범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폐수 배출량이 하루 2천^m 이상인 1종 사업장의 경우 t당 폐수처리비용(95년 기준)이 1백63원인 반면 폐수 배출량이 50^m 미만인 5종 사업장은 처리비용이 t당 3천2백27원으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폐수 정화시설 56개 신설

환경부는 지난 2월 10일 식수원이 되고 있는 4대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4대강 유역 등에 폐수종말처리장 등 모두 56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올해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장밀집지역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6곳은 ▲천안3단지 ▲전북 금산 ▲경북 달성군 구지 ▲경북 김천군 구성 ▲강원 북평 ▲경북 성주군 월항 등이다.

또 농공단지조 조성된 전남 완도와 경남 의령군 봉수 단지에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

특히 축산농가의 폐수가 강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고 3백10억원을 지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4대강 유역에 18곳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관리인. 1996. 3

강별로 보면 수도권인 식수원인 한강 주변에 7개를 비롯 ▲금강 6개 ▲낙동강 4개 ▲영산강 1개 등이다.

또한 대규모 축산업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축산폐수정화시설도 그 처리기준을 강화해 자율처리한 축산폐수가 강물의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중 낡아서 정화효율이 낮은 시설 28곳에 국고 1백29억원을 지원, 신규시설물로 교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하천바닥에 쌓인 찌꺼기가 부패해 수질을 오염시킴에 따라 전국 46개 하천에서 퇴적물 준설작업을 하는 등 하천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배출량의 증가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만큼 올해에 이어 내년도도 오·폐수 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에 환경기술 무상지원

환경부는 지난 2월 12일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환경기술을 무상 지원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기준이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으나 환경기술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이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 폐수처리장의 설계 및 관리 경험을 축적해온 환경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부산에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 光州에 호남지사를 각각 개설, 영남권과 호남권의 중소기업체에 본격적으로 환경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및 중부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의 공단본부가 기술지원사업을 펴되 내년에 서울과 대전에 지사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 한해동안 무상지원사업을 통해 4백50여개 중소기업체의 쓰레기 소각로,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작업을 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등 4백41개 환경기초시설중 지자체가 기술진단을 희망하는 32개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실시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개·보수 방안을 제시해줄